법무부 **보도설명자료**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. 10. 30.(금)

관광 와서 불법취업… '제주 무비자' 딜레마 보도 관련

- 2026. 10. 29. 조선일보 보도 관련 설명 -

법무부(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)는 '26년 10월 29일 조선일보의 "관광 와서 불법취업 ..... '제주 무비자' 딜레마" 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□ 제주지역 무비자 입국 불법체류·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법무부 출입국외국인·정책본부는 2026년 10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약 2개월간 「제주 무비자 입국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」을 실시하고 있으며, 10월 28일(수)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총 232명을 적발하였습니다.

제주 무비자 입국 불법체류 외국인, 상습 불법고용 사업주,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.

□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 및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.

법무부 출입국외국인·정책본부는 10월 29일(목) 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, 경찰청,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「국경·체류·안전 실무분과위원회(위원장 : 출입국정책단장)」를 개최하여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 및 불법체류 문제에 대한 범정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.

후속조치로, 경찰·해양경찰 등과 합동단속 강화 및 범죄정보를 공유하고, 무면허운전·불법유상운송·마약 등 외국인 관련 범죄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,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합동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.

□ 입국심사를 강화하여 부적격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.

법무부는 현재 「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(IPC)」을 활용하여 인터폴 수배자, 국내 범죄 전력자 등 위험인물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.

※ 제주 입국 거부 현황('26. 1. ~ 9월) : 3,103명(입국규제, 위변조, 입국 불허 등)

무비자 입국 외국인의 입국목적, 체류 계획 등을 더욱 면밀히 심사하여 불법 취업 목적 등 부적격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.

□ 제주 무비자 입국 외국인에 대한 『출도 사전확인시스템 도입』을 추진하겠습니다.

제주도 무비자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이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발 국내선 탑승권 발권 시 외국인 승객의 출도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「출도 사전확인시스템」 도입을 추진하고, 관련 예산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.

□ 법무부는 앞으로도 제주 무비자 제도의 관광 활성화 취지를 유지하면서 불법체류·불법취업과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,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단속 인력 확충과 출입국관리체계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**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외국인 체류 환경을 조성**해 나가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	책임자	과 장	강성록 (02-2110-4075)
		담당자	사무관	김택균 (02-2110-4082)
	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	책임자	과 장	김태형 (02-2110-4035)
		담당자	사무관	이동용 (02-2110-404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